

文-安 후보단일화 이번주 분수령

새정치 공동선언 마무리 단계…오늘부터 룰 협상 착수

단일화 방식 협의·경제복지정책·통일외교안보 3개팀 구성 합의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협의를 마무리 단계에 근접시킨데 이어 12일부터 단일화 룰 협의에 본격 착수키로 하는 등 두 후보 간 단일화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처럼 양측간 단일화 논의가 급진전하면서 이번주가 야권 후보 단일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안 후보는 11일 정오께 전화통화를 갖고 단일화 방식 협의팀, 경제복지정책팀, 통일외교안보정책팀 등 3개 팀 구성에 합의했다.

안 후보가 이날 오전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대선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발표 회견에서 지난 6일 합의한 새정치 공동선언 발표와 별도로 경제개혁과 안보평화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단일화 방식 협의에 착수할 것을 공식 제안하자 문 후보가 즉각 이를 수용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대선 선거운동을 법정선거비용(약 560억원)의 절반 이내에서 치를 것을 약속하고 다른 후보들에게 동참을 제의했고, 문 후보 측은 대변인은 '반값 선거비용'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의해 실현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단일화 방식 협의팀은 후보별로 3명씩 참여하고 경제복지정책팀과 통일외교안보정책팀은 각각 2명으로 구성돼, 이르면 12일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양측 실무팀은 지난 9일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가진 2차 실무협상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보장하고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검찰·국정원·경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권한도 강화키로 했다.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있어 시민참여를 보장, 윤리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 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원 연금은 폐지키로 했다.

양측 실무협상팀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막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 보장을 비롯,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검찰·국정원·경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권한도 강화키로 했다.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있어 시민참여를 보장, 윤리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 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원 연금은 폐지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가능성도 점쳐진다.

새정치 공동선언 작성是为了 양측 실무팀의 정해구, 김성식 팀장도 이날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4시간에 걸친 4차 실무협의를 가진 뒤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빠르면 12일 새정치 공동선언문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양측 실무팀은 지난 9일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가진 2차 실무협상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한법 대로 확실히 보장하기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및 정당개혁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핵심사안 중 하나로 꼽혔던 국회의원 정원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했듯 향후 룰 협상이 좌초했을 경우 도출하지 못하고 난항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차기정부의 7대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정책발표 및 노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안, 광주·전남 지지선언 경쟁

전통시장 상인회 등 "文지지"…1100개 벤처기업인은 "안지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지지선언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지선언 과정에 지지자 명단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11일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12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할 예정이다. 13일에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하고,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연합 등 일부 단체들이 문 후보에 대한 지

지선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일에는 광주·전남·전북지역 대학교수 992명이 문 후보를 지지했으며, 7일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자 419명이 문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또한, 문 후보가 광주를 방문한 지난 9일에는 광주·전남·전북·대구 지역 등 교수 2000여명이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 광주지역 선대위는 광주·전남·전북·대구 등의 문 후보에 대한 지지세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9일 영·호남교수 지지선언 중 일부 명단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철수 후보 측 지지단체인 광주·전남 시민정책포럼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한 대학교수들의 일부 명단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지지선언 명단에 포함된 일부 교수들 중 지지는 고사하고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지지선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전남 1100개 벤처기업인들은 12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 오늘 광주행…호남민심 다지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2일 광주를 방문해 동서화합과 대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선다.

11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날 오후 5시3분 KTX으로 광주역에 도착해 '동서화합을 위한 정책 홍보 및 18대 대선 투표 참여 자원봉사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광주에 상주하고 있는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과 한

박 후보는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대학생, 청소년, 총장로 상인들을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반값 등록금, 청년 일자리 창출, 구도심 상권 회복 등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차질없이 원공되도록 지원하고,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된 문화사업 투자 진흥 지구가 활성화돼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에게 없는 4가지'

문축, 국정경험·서민 후보 부각 단일화 승리 전략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야권 후보단일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없는 '4가지'를 알리는 전략을 내세웠다.

문 후보 측이 내세우는 '4가지'는 국정경험과 정치적 기반, 서민후보, 도덕성으로 이 같은 장점을 전면에 포진해 '본선 경쟁력'을 앞세운 안 후보 측의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후보론'을 깨끗이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 측의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11일 "단일화 방식이 어떻게 되든 쉽게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 측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요직을 두루 거친 경험과 민주당이라는 든든한 정치적 기반으로 안정

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안 후보에 비해 문 후보가 확실히 우위를 가지는 대목이라고 판단, 이를 집중 부각할 생각이다. 실향민 2세대로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서민에 가까운 삶의 궤적을 그려온 것도 문 후보의 강점이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누구보다 국민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후보로서 여권의 겸증 공세에도 특별하게 드러난 흥미 없었던 만큼 대통령 후보로서의 신뢰도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문 후보 측은 비록 뒤지긴 하지만 문 후보의 지지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안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문 후보 측은 비록 뒤지긴 하지만 문 후보의 지지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안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 후보 측은 단일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책임을 확장하는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 후보 측은 단일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책임을 확장하는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중도·무당과 지지층의 이